

# “어려운 국민 먼저”... 당정청, 2차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자영업자·소상공인·실업자 등 피해 큰 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추경 7조 편성...추석전 집행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을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4차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뉴시스

계층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은 7조원 중반 규모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위기 저소득층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등 긴급재난지

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추석 연휴 이동 자제 요청과 함께 서민물가 관리, 민생부담 완화, 전 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긴급 민생·경제 중

합대책을 관계 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이번 주 중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당 차원에서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있었다.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 마련이 어렵고, 국민 갈등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당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는 점,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그렇기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혜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꼽았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과 나눠요”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 공고 365억 투입... 주민 주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용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신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500kw 이상)·풍력 발전사업(3MW 이상)에 참여를 희

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촉

진을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제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담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 중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 秋장관 아들 구하기



문영철 1저자의 국방 칼럼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했다고 알려졌다. 장교복무를 경험한 김병주(육군 대장 전역), 홍익표 의원(중의 전역)과 김남국 의원은 적극적으로 ‘서 일병 구하기’ 작전을 감행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국방장관과 집권여당의 ‘정·당 합동작전’인 셈이다.

그러면 이 작전은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작전이었을까. 아니다. 법무장관의 아들이니 군법(국방훈장 관리 훈령 2019년 12월 개정 전 기준)으로 따져보자.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5조 2항은 현역병은 의사의 소견과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 장관의 아들은 복무 중 19일을 병가(총 58일 휴가로 사용)로 사용했음에도 소견서와 진단서 등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 훈령 제4조(요양심사위원) 1항은 민간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은 군병원 치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5년 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도 위반했다.

군법은 법이 아닌 결과. 국방부 장관과 육군대장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실병지휘를 해보지도 않은 정훈병과 단기복무장교 출신의 홍익표 의원 “장교해봤는데 자주 있는 일”이라며 짧은 군장교 복무를 근거로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김남국 의원은 20대들에게 물어봤는데 58일 휴가는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21개월 복무기준으로 현역병 정기휴가는 총 28일(일병 10일, 상병 9일, 병장 9일)이다. 외국처럼 고위층 자체가 전병터에서 싸우시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부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captainm@

## 저소득 장기실업자에 1인당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워크넷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자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 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참여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6~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지난달 25일 경북 군위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자가 작은 사과 ‘루비에스’를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 “신규개발 품종 10개, 113.6조 경제적 효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

벼와 콩 등 새로 개발·보급된 10개 품종이 평균 26년의 품종수명 기간 동안 총 113조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보급한 10개 품종 작물 생산이 식량과 원예 2개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란 품종 등 개발된 기술을 도입·생산할 경우 부가가치 향

출로 인해 해당 산업과 타 산업의 전·후방 생산활동에 미치는 효과다.

이에 따르면, 이들 품종의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농촌진흥청의 연구 개발 예산액인 6504억원의 약 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식량 분야에서는 다수성 고품질 벼 품종인 ‘신동진’, 가공 적성이 높은 콩 품종인 ‘대원’, 다수성 착유용 들깨 품종 ‘다유’ 등 5개 품종이 개발·보급됐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73조9000억원으로 산출됐다.

/한용수 기자